 금융위원회	<div>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</div> <div>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</div>			
보 도 자 료				
보도	배포 시	배포	2021.12.29.(수) 10:00	

책 임 자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이 석 란(02-2100-2610)	담 당 자	최 범 석 사무관 (02-2100-2612) 서 지 은 사무관 (02-2100-2611)
	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장 최 윤 화(02-750-1071)		김 명 회 팀장 (02-750-1081)
	신용보증기금 기업개선부장 서 주 호(053-430-4411)		권 오 정 팀장 (053-430-4413)
	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장 서 정 훈(051-663-8181)		김 병 철 팀장 (051-663-8182)
	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장 이 인 호(02-2128-8120)		김 민 희 과장 (02-2128-8139)
	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리스크관리팀장 송 명 호(02-2080-6631)		조 영 일 차장 (02-2080-6633)
	SGI 서울보증보험 구상지원부장 이 진 원(02-3671-7231)		이 세 은 과장 (02-3671-7245)

제 목 : 금융위원회는 서민·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■ 금융위는 내년에도 서민·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노력*을 지속할 계획

- * ①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 추진
 ② 서민·실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
 ③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
 ④ 불법사금융, 보이스피싱 등 척결 추진

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, 금일 신용회복위원회-5개 보증기관(신보, 주금공, 농신보, 서금원, SGI)간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

-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여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

-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'21.12.29.(수) 한국프레스센터에서 “소상공인·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”에 참석하였습니다.
- 금융위원장은 금번 행사에서 서민·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,
-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점검하고, 동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.

※ 소상공인·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개요

- (일시/장소) '21.12.29.(수) 10:00 / 신용회복위원회 11층 대회의실
- (주요 참석자 : 6명) 금융위원장,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(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),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,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, 유찬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,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사장

-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, 금융위원장은 서민·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.
- 현재 중·저신용자의 대출여건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,
 - 금리상승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,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내년에도 서민·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,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< 서민·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>

- (1)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 추진
- (2) 서민·실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
- (3)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
- (4)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방지

□ 금융위원장은 그간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,

- 오히려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의 신속·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,
-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,
 -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복위의 철저한 상환능력 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금융위원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,

-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*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* 마스크 의무 착용, 회식·모임 자제,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주기적 소독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출입자명부 관리,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등

□ 마지막으로, 서민·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,

- 오늘 논의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같이 선제적인 정책 대응도 지속 발굴·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※ [별첨]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1. 추진 배경

-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에 대한 보증부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
* 신보, 주금공, 서금원, 농신보, SGI 개인대상 보증부대출 잔액(조원) :
(‘18년)191.1 (‘19년)215.1 (‘20년)251.8 (‘21.9월)277.9

- 이들 보증부대출의 경우 아직 부실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*,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,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 출시한지 얼마 안된 서민금융진흥원 일부 상품(햇살론 15, 햇살론유스 등)을 제외하면 '20년에 비해 '21.9월 대위변제율 하락

- 또한,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서는 그간 신용회복제도 개선*에 따라 연체기간·상환능력에 따른 촘촘한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,

*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(‘18.12월),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(‘20.10월),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(‘21.9월) 등

-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와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상이하여 충분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*이 있었습니다.

* 장기간 연체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완제하지 못하고 다시 연체상황에 놓이는 등 경제적 재기에 실패하는 경우 발생

< 일반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부실채권 처리과정 차이점 >

	일반 금융회사 대출	보증부 대출
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가능 시점	연체 발생시점부터 신청 가능 (연체 전이라도 연체우려 있을시 가능)	연체 후 대위변제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신청 가능
상각기준	일반적으로 연체 후 6개월~1년 경과시 상각처리	재정안정성 및 구상채권 회수 등을 위해 상각요건 제한적

- 이에,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취약 개인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,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
2. 개선 내용

-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서민·취약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와 5개 보증기관(신보, 주금공, 서금원, 농신보, SGI)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①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개선

- (현행) 신복위와 금융회사·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~70%, 미상각채권은 0~30%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.

- 그런데,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*,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**,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(약 1/2 수준)이 낮은 상황입니다.

*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상각채권은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통상 연체 후 6개월~1년 경과시 상각하나, 보증기관은 상각에 따른 비용상 이점 부재

** 5개 기관의 전체 상각채권중 대위변제 후 2년 이하 경과 채권은 5%에 불과 (일반 금융회사는 연체 후 1년 경과시 대부분 상각)

- (개선)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 (0~70%)*할 계획입니다.

* 상각채권은 아닌 만큼,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각채권 감면율(20~70%) 보다 감면율 범위 넓게 인정(0~70%)

⇒ 이를 통해 약 2.1조원(30만건)*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※ 해당 채권이 모두 감면되는 것이 아니며, 동 채권 중 실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

② 원금 감면기준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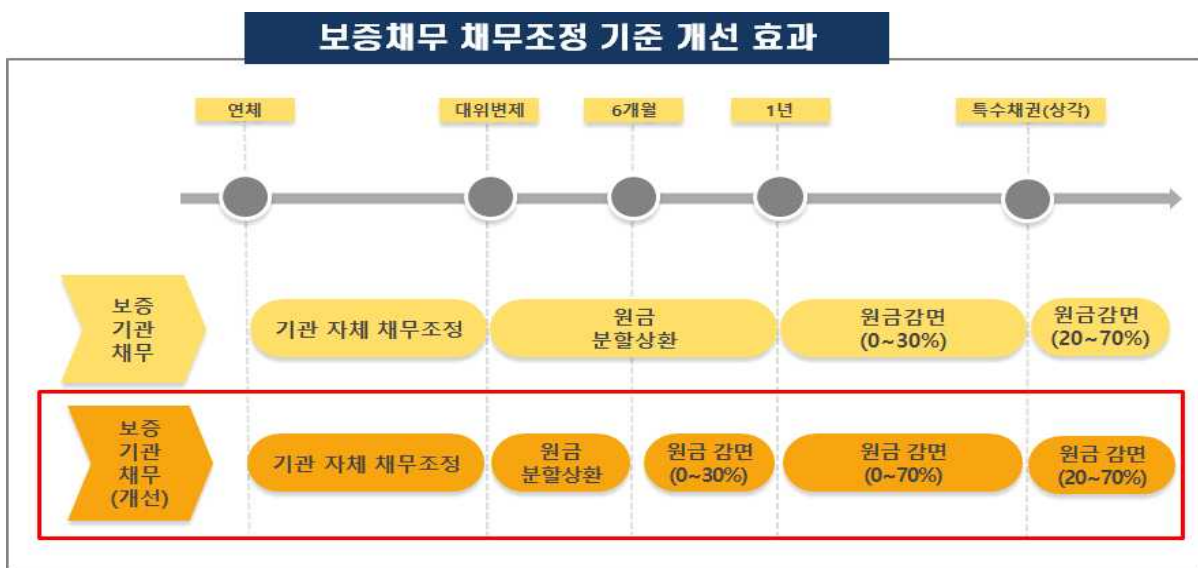
- (현행)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,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(0~30%)이 가능합니다.

-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,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.

*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이 가능하나,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(약 3개월)을 포함하여 약 1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 가능

- (개선)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.

⇒ 이를 통해 약 0.8조원(7.2만건)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
□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,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.

- 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,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'23년까지 시범적·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.

- 다만,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*,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'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.

*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: 23.3% , 신복위 평균 회수율 : 45.2%

- ② 엄격한 심사*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,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.

※ **신복위 채무조정시 도덕적해이 검증 절차**

- 신복위는 채무조정시 신복위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, 채권금융기관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검증

- ① (신복위 심사) 채무자의 채무내역, 소득,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, 채권금융기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채무조정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

* 채무자의 소득,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, 행정정보 및 채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

- ② (심의위 심의)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·의결

*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,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, 소비자단체,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충족 및 관련 기관 추천자로 구성

- ③ (채권금융기관 동의)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에 동의회신 통지 →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결정

*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금융회사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이상일 때 개인채무조정안 확정

3. 기타 신용회복 지원방안

- 신복위는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. (☞참고1)

※ **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 개요**

- ① 특별상환유예 제도 확대·상시화

* (현행) 코로나19 피해자 6개월 상환유예 → (개선) 재난피해자 1년 상환유예

- ② 최대감면율(70%) 적용 재난피해자 지원대상 확대

* (현행) 재난 사망자 유족, 부상자, 격리자 → (개선) 재난으로 인한 실직자·폐업자 포함

- ③ 면책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

* (현행) 채무조정 이행 완료에도 불구하고 보증제한 등 불이익 잔존 → (개선) 채무조정 이행 완료시 보증제한 등 불이익 줄 수 없도록 제한

4. 향후 계획

-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'22.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-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 등 외부 충격 발생시 더 큰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에 대해 강화된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

※ (참고)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요

연체일수	지원 제도	지원 내용
연체前~연체30일	신속채무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6개월 원금상환유예 + (필요시) 최대 10년 분할상환 ■ 당초 약정금리 적용(15% 상한)
연체 31~89일	사전채무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대 10년 분할상환 ■ 약정금리 30~70% 감면(8% 상한)
연체 90일~	개인워크아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대 8년 분할상환 ■ 금리면제 ■ 채무원금 감면(미상각채무 0~30%, 상각채무 20~70%, 통상 연체 1년 후 상각)

1. 코로나19 등 재난 및 외부 충격 대비 프로그램 마련

① 특별상환유예 제도 상시화

- (현행) 채무조정 이행중인 코로나19 피해자에 6개월 무이자 상환유예(특별상환유예) 지원
- (개선)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「재난안전법」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

구분	현행	개선
명칭	특별상환유예	재난상환유예
지원대상	'20.4.29. 이전 이자율 채무조정, 채무조정 신청자	모든 채무조정 신청자
유예기간	6개월	최장1년
유예이자	면제	납입(2%)

* 既 특별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6개월(1회) 추가 상환유예 지원 가능

② 재난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

- (현행)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에 따른 이재민*에 한하여 최대감면율(70%) 적용

* 재해로 인한 사망자·실종자의 유족, 부상당한 사람,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출입 통제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

- (개선)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*에도 최대감면율(70%) 적용

* 예) ① 코로나 확진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6개월 이상 근로를 못한 경우
②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로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

2. 기타 개선사항

① 채무조정 특례 적용 대학생 범위 확대

- (현행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등에 재학중인 경우 대학생 채무조정 특례* 적용

* 원금감면 최대 70% 지원, 상환유예 기간 최장 4년,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등

- (개선) 대학생 채무조정 특례 대상에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2항,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대상 고등교육기관* 추가

*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(다만,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) 및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5호에 따른 기능대학 등

② 면책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

- (현행)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이후 완제를 통해 면책된 채무의 경우, 이행의무는 없으나 보유시 여전히 불이익* 잔존

* 신규 보증서 발급 자체를 제한하거나, 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액에서 차감한 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생

- (개선)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완료시 면책된 채무를 사유로 신규보증 제한 등 채무조정 이행 완제자 또는 채무관련인에게 금융거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제한

1. 이번에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이유는?

- ☐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에 대한 보증부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

* 신보, 주금공, 서금원, 농신보, SGI 개인대상 보증부대출 잔액(조원) :
(‘18년)191.1 (‘19년)215.1 (‘20년)251.8 (‘21.9말)277.9

- ☐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서는 그간 신용회복제도 개선*에 따라 연체기간·상환능력에 따른 촘촘한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,

*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(‘18.12월),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(‘20.10월),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(‘21.9월) 등

-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와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상이*하여 충분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 존재

※ 일반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부실채권 처리과정 차이점

- ① 일반 금융회사 대출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가능
○ 보증부대출의 경우 연체 후 대위변제가 발생한 다음 신복위 채무조정 가능
- ② 일반 금융회사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체 후 6개월~1년 경과시 상각처리
○ 보증부대출의 경우 재정안정성 및 구상채권 회수 등을 위해 상각요건 엄격

- ☐ 금번 방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증부대출에 초점을 맞추어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임

2. 왜 '23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인지?

- ☐ 코로나19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,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체의 늪에 빠진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성에 보증기관이 공감하여,
 - 우선적으로 '23년까지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
- ☐ 동 조치를 통한 회수상황, 보증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상시화 또는 개선방향 등을 보증기관들과 향후 추가로 협의해 나갈 계획

3. 금번 방안을 통해 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?

- ☐ 보증기관의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은 상환의지가 강한 분들로, 신복위 회수율도 각 기관의 자체 회수율보다 높은 편임*
 - *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: 23.3% , 신복위 평균 회수율 : 45.2%
 - 일반 금융회사도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가능성과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회수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고려하여, 신복위 채무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
- ☐ '23년까지 개선방안을 시행하면서 회수상황, 보증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상시화 또는 개선방향 등을 보증기관들과 향후 추가로 협의해 나갈 계획

4. 감면율 확대 등으로 인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는 것 아닌지?

- ☐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시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되어 신규대출이 곤란해지는 등 신용상 불이익 발생
 -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할 때, 모든 연체채무자가 채무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,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분들만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
- ☐ 또한, 신복위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,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음

5.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복위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?

- ☐ 엄격한 심사*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,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

※ 신복위 채무조정시 도덕적해이 검증 절차

- ☐ 신복위는 채무조정시 신복위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, 채권금융기관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검증

① (신복위 심사) 채무자의 채무내역, 소득,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, 채권금융기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채무조정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

* 채무자의 소득,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, 행정정보 및 채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

② (심의위 심의)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·의결

*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,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, 소비자단체,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충족 및 관련 기관 추천자로 구성

③ (채권금융기관 동의)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에 동의회신 통지
→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결정

*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금융회사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이상일 때 개인채무조정안 확정

6.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되는지?

☐ 이미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,

○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채무조정 신청건부터 적용

7. 보증기관 채무 보유자는 어떻게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되는지?

☐ 전국 각지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방문이 어려운 경우 Web, App*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

* Web(cyber.ccrs.or.kr), App(신용회복위원회 새로미)

☐ 방문 전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신복위 상담센터(1600-5500)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